

## 유럽연합(EU)의 연구기술개발 정책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4년 11월

---

유럽연합의 비전은 2010년까지 “세계 제일의 지식기반 경제”를 달성하며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리스본 전략과 마르셀로나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EU 기술개발정책은 회원국 간에 분산 추진되던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유럽연구지대(ERA)의 형성과 그 실천계획으로 종합프로그램(FP) 수립, 공동 기술기반 구축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 추진하고 있다.

기술정책 통합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소위 “공개적 조정 방식(OMC)”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통합체로서의 EU 집행부가 갖는 조정과 통제의 한계를 감안하여 창안해 낸 독특한 접근방식이다.

EU의 기술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비판이 가해져 왔으며, 집행부는 이를 감안, 과거의 경험을 살려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국제적 주변정세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원국들 간, 산업분야 간, 그리고 EU 조직 내에서 집행부, 이사회 및 유럽의회 등의 대립되는 이해와 역할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는지는 계속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것 같다.

---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EU 공동연구 개발정책의 배경

EU는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지역통합의 표본이다. EU는 최근 상대적으로 정체된 유럽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연구기술개발(RTD)정책을 EU의 공동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EU의 연구개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EU의 혁신 성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빈약한 EU의 경제성과

<표1>에는 미국 및 일본과 대비된 EU의 주요 경제지표가 기간별로 정리되어 있다. 1960-90년 사이 EU의 경제는 일본에는 뒤지지만 미국보다는 앞섰고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1990년 후반,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모든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지고 있다.

2) 낮은 연구개발 투자비율

그러면 이처럼 열악한 성과와 추세의 원인은 무엇인가? EU는 그 가장 큰 원인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기술개발 투자와 지식 축적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1995~1999년 사이 EU국들의 총 연구기술개발 투자는 GDP의 1.8%에 불과하여 미국의 2.5%나 일본의 3.0%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으며, 민간분야 연구기술개발 투자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각각 GDP의 2%대를 유지한 반면 EU국들은 약 1%에 그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EU는 연구기술개발비 비중과 증가 속도 모두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연구기술개발 지출의 70%가 민간분야에서 오는 반면, EU는 그 비중이 58%이고 제조업의 연구기술개발 중 하이테크의 비중도 역시 미국에 뒤지고 있다. 또한

<표 1> EU, 미국, 일본의 성장, 생산성 및 고용 추세 비교

(단위: %)

	지역/국가	1961-90년	1990-95년	1995-2000년	2000-2005년
실질 GDP	EU-15	3.4	1.5	2.7	1.6
	미국	3.5	2.5	4.1	2.6
	일본	6.1	1.5	1.4	1.7
노동생산성	EU-15	2.9	1.9	1.3	0.9
	미국	1.5	1.3	2.1	2.3
	일본	5.1	0.8	1.4	2.0
취업자 수	EU-15	0.4	-0.4	1.4	0.6
	미국	2.0	1.1	2.0	0.4
	일본	1.0	0.8	0.0	-0.3

자료: 유럽 집행위원회, 경제재정 총국(D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04년 봄 예상 자료에서 재정리.

&lt;표 2&gt; EU와 미국간 연구기술개발 격차

(단위: %)

	기간	EU	미국
연구기술개발 지출/GDP	2001	1.9	2.8
연구기술개발 지출 증가율*	1995-2001	3.5	5.1
민간경제 연구기술개발 지출/ 총 연구기술개발 지출	2001	58	70
하이테크 연구기술개발/ 제조업 연구기술개발	2001	47	59
보건 연구기술개발 지출/ 정부 연구기술개발 예산	2001	8	25
보건 연구기술개발 지출/GDP	2001	0.05	0.2
국방 연구기술개발 지출/ 정부 연구기술개발 예산	EU;2001, 미국;2003	15	54
국방 연구기술개발 지출/GDP	EU;2001, 미국;2003	0.1	0.5

\*구매평가력(PPP)로 조정된 것임

자료: CEPS Working Documents No.205/July 2004 p.31

외부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보건 분야나 국방 분야의 R&D 지출이 정부의 연구기술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현격한 차이로 뒤지고 있다.

EU의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수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종업원 수 대비 연구기술개발 종사자수 비중을 보면 미국이 0.8%, 일본이 1% 대인 반면, EU는 불과 0.5%이며 기업분야의 연구인력 비중 역시 0.2%에 머물러 미국과 일본의 1/3 수준이다. 연구기술개발에서 EU의 상대적 열위는 현대 경제에서 핵심적인 생산성 향상 요인인 인적 자본과 지식 축적의 열위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는 EU의 노동생산성이 90

년대 전반의 1.9%에서 90년대 후반 1.3%를 거쳐 2000년대 전반에 다시 0.9%로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과의 상대적 비교에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리스본 전략과 마르셀로나 목표

현재 EU의 기술개발정책의 철학, 전략 및 목표는 리스본 전략 및 마르셀로나 목표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연평균경제성장률 3%와 2000년 현재 61% 수준에 있는 취업률(=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을 70%에 접근시킨다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여러 후속 합의와 계획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3월에 열린 바르셀로나 각료회의에서 EU는 2010년에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이 투자 중 2/3는 민간분야에서 충당한다는 데 합의
- 2002년 9월 집행위원회의 공람에는 “유럽을 위해 더 많이 연구하자: GDP 3%를 향하여 (More Research for Europe: Towards 3% of GDP)”를 하나의 강령으로 채택
- 2003년 3월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EU 확장에 따른 “유럽연구지대의 강화”를 촉구
- 2003년 6월 집행위원회는 “연구 증대:

유럽행동계획(Increasing in Research: An Action Plan for Europe)”에서 바르셀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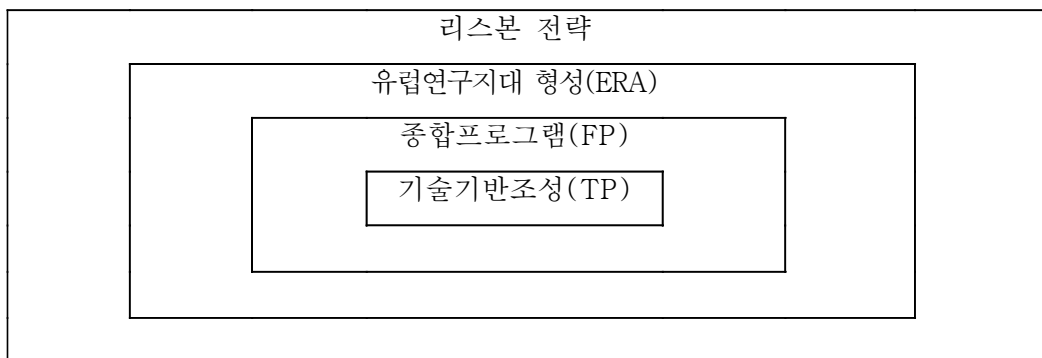
- 2003년 10월의 각료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성장을 위한 유럽의 도전(A European Initiative for Growth)”이라는 공람을 채택하여 네트워크와 지식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

이상 일련의 조치들은 보면 EU가 기술혁신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를 알 수 있다.

### 3. EU의 연구기술개발 촉진체계

EU의 기술개발 지원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간별로도 상이하여 간단히 요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리스본 전략을 하나의 비전으로 보면, 그 체계는 대략 <그림 1>과 같이 유럽연구지대 형성(ERA)을 목

<그림 1> EU의 연구기술개발 체계



표로 종합프로그램(FP)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이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기반(TP)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체제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자.

### 1) 유럽연구지대(ERA)의 형성

ERA는 리스본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2010년까지 세계 제일의 지식기반 경제”에 도달하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진 EU 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00년 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연구지대를 추구하며”라는 제목의 공람에는 EU의 연구기술개발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 천명되어 있다. 이 공람은 유럽이 회원국들의 훌륭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 EU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지대를 결성하고,
- 분산된 회원국들 간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며,
- 연구 성과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키는 혁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2) 종합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EU는 상대적인 기술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핵

심과제로 개별 회원국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1984년부터 종합프로그램(FP)을 마련, 시행하여 현재 6차 프로그램(FP6)에 이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간을 5년 단위로 하지만 연속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감안,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첫 해와 기존 프로그램의 마지막 해가 겹치도록 연계시킨 연동 계획이며, 집행위원회 내의 연구 총국(DG-Research)이 주관하고 있다.

초기의 종합프로그램은 회원국 간의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의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차수가 바뀌면서 EU의 통합 정도와 국제 여건변화에 따라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예로써, 5차 종합프로그램은 “연구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고, 6차(2002-2006)는 “연구여건 조성 및 통합의 촉진”이었다. 중점 지원분야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종합프로그램에서 18개 사업 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5차에 와서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현재 진행 중인 6차 종합프로그램(2002-2006)의 추진전략은 유럽연구지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분산과 중복을 피함으로써 연구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다음의 세 영역으로 압축하였다.

**<표 3> 제6차 종합프로그램의 핵심 영역**

3대 핵심 영역	개략적 내용
중점적, 통합적 유럽연구	7대 우선지원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제협력의 강화
유럽연구지대 구축	인적 자원개발, 연구 인프라 구축, 과학과 사회의 연계
유럽연구지대 기반 강화	연구 활동의 지원체계 강화와 조정기재 확대

자료: 연구 총국(DG-Research) 자료를 토대로 정리

이상의 3대 핵심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에 175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현재 집행 중이다. 지원 기준은 우선 최소단위 이상의 규모, 다수의 회원국 협동, 공동경비분담 등의 기준에 따라 EU의 경쟁력 제고와 통합 촉진에 기여가 큰 사업을 우선한다. 여기에 속하는 7대 중점 추진분야는 계놈과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공학 및 신소재, 항공우주공학, 식품안전 및 예방의학, 지속가능한 개발, 유럽형 지식산업 등이다.

**3) 기술기반의 형성**

2004년 9월 현재, 7차(2006-2010) 종합프로그램은 기존의 통합촉진 외에 기초연구의 강화, 기술기반의 형성, 연구 인프라 구축 등 3대 요소를 추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중 기술기반의 형성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6차와 7차 종합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7차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경쟁력 제고라는 리스본 전략 추진,
- 유럽연구지대 형성과 3%의 연구개발비 증액 목표 달성,
- 다른 EU 정책분야와의 연계 강화,
- 역량집중의 강화 등에 두고 있다.

<표 4>를 보면,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EU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함과 동시에 이들을 서로 연계시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종합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7차에서도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이 현재(2004년 9월)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 철강 등 기존 산업의 혁신,
- 계놈과 생명공학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 의약혁신 등 공공재화와 서비스

**<표 4> 기술기반의 다차원적 접근 방식**

집중 분야	관련 당사자 또는 주요 수단
광범위한 참여 촉진	산업계, 공공기관, 연구계, 금융계, 표준화기구, 규제관련기구, 시민단체, 소비자 및 최종수요자
공공 및 민간 재원의 동원	회원국, 지역 및 민간연구기금, 역내 종합프로그램,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EIB), EUREKA
전파, 확산	교육, 훈련, 공람, 보급

자료: 연구 총국(DG-Research) 자료를 토대로 정리

- 우주항공 등 전략적 하이테크 분야
- 대체연료와 같이 기존산업을 초월하는 신산업 등이 논의되지만 아직 회원국들 간의 협의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7차 종합프로그램 역시 기술의 실용성 제고에 중점을 둔 6차의 연장선상에서 민간 산업계에서 촉발되는(industry driven)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예산과 지원절차

##### 1) 예산 규모

제1차에서 37억 5천 유로에 머물렀던 종합프로그램의 예산은 증액을 거듭하여 제6차에서는 175억 유로로 증가하였고, 현재 준비 중인 제7차에서는 예산을 400억 유로로 또다시 두 배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

##### 2) 참여자격과 자금지원 신청자격

종합프로그램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국의 연구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지만 회원국 또는 협정국(associated countries) 출신자가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비회원국 출신 연구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출신자는 자신의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EU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EU가 제한적으로 지정한 국가로 개도국, 지중해 연안국, 서부 발칸국, 러시아 및 NIS 국가들, 둘째, 공모조건에 별도로 인정된 경우이거나 R&D 과제 수행에 필수적일 경우.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은 3개 이상의 회원국 또는 협정국 출신인 3개 이상의 법적 객체와 여기에 참여하는 제3국 출신자로 규정되어 있다. 2003년 종합프로그램에 공모한 총 14,000여 개의 신청 중 20% 정도가 제3국출신 파트너

<표 5> 제6차 종합프로그램 예산 개요

(단위: 백만 유로)

관련 협약	프로그램별 사업	예산	비중(%)
유럽공동체 협약	주제별 우선사업 (7대 우선 분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 작업)	12,770	73.0
	유럽연구지대 구축관련 사업	3,500	20.0
EURATOM 협약관련사업	방사성 폐기물, 핵융합, 공동연구센터 등	1,230	7.0
총계		17,500	100.0

자료: 외교통상부(2004); EU 정책브리핑

를 공동연구자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선정률은 약 19%에 달한다. 제3국 파트너로는 미국이 323건에 459 파트너로 가장 많고, 한국도 18개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그 중 6개를 승인 받아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다.

### 3)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준비와 신청단계로 나뉜다. 지원 준비는 ① 연구계획서 작성, ② 잠재적 파트너 물색 및 협의, ③ 연구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또한, 지원 신청은 ① 제안서 제출, ② 평가, ③ 내용과 절차에 대한 최종 협의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인력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며, 통과된 제안서는 다시 집행위원회 내의 각 36개 정책총국(DG)의 내부평가 및 협의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되면 계약 절차에 들어간다.

EU 전체 기업체의 99.8%와 총 고용의 2/3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장래 유럽의 경쟁력과 고용창출의 기반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EU의 산업정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은 집행위원회 산하 36개 총국(DG) 중 연구총국이 아닌 기업총국(DG-Enterprise)이 주관하며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 동안 EU의 연구개발 성과 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았 으면서도 유독 기업경쟁력이 뒤쳐진 이유가 기술을 실용화하고 상품화하는 기업의 혁신동력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 EU는 6차 종합프로그램 부터 연구예산의 15%를 오직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업에만 쓰도록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의 새 장을 열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우선 지원대상은 제6차 종합 프로그램의 7대 우선과제인 연구개발 활동 중 특히 우수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통합 프로젝트

## 5. 연구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이며, 다음으로 혁신능력은 있으나 연구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협동연구나 공동연구에 참여할 경우 과학이나 기술의 분야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회원국 출신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2개 회원국 출신 3개 참여팀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물론 제3국출신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 지원에는 제한이 있는 것도 여타 기술지원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EU에서 중소기업이란 250명 미만의 종업원, 4천만 유로 이하의 연 매출액 또는 2천 7백만 유로 이하의 경상이익을 내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 신청은 종합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는 일반과제와 기간과 분야가 한정된 지정 과제로 나누어지며, 기타 평가 및 선정 절차는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다. 제안서 작성이나 지원 절차 또는 파트너 물색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돕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 EU의 공식기구로

- 각국 중소기업 연락 사무소(The National Contact Points for SMEs)
- 연구총국 중소기업 지원상담 서비스(SME Helpline of DG-Research)
- 정보서비스연구개발공동체(CORDIS) 내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

등이 있으며, 많은 컨설팅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6. 리스본 전략과 공개적 조정방식(OMC)

리스본 결의는 연구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서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정책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 “공개적 조정방식”을 채택한 것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공개적 조정방식이란, 원래 유럽 차원의 고용정책 조정을 위해서 개발된 장치로 개별 회원국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국내시장의 범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EU 차원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경제정책적 조정방식이다. 이것은 개별국가의 정책보다 EU 차원의 정책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만 EU가 개입하는 “보정원칙(subsidi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하며, 회원국의 이익과 EU 전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으로도 표현된다. 이 조정방식은 대략

- 개별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침,
- 이 지침을 수행할 국가적 행동계획,
- 개별 회원국의 경제지표 작성에 대한 표준,
- 모범사례와 회원국 성취도와의 비교기준,
- 개별국가 진척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는 회원국들이 바르셀로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의 긍정적, 부정적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함으로써 회원국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EU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회적 통제방법이다.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고용정책 수행, 연구개발비 지출현황 등을 매년 발표하는 것도 회원국들 간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종의 “도의적 권고(moral suasion)”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과연 바르셀로나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모든 회원국들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유럽연구지대를 형성하려면 2004년 5월 신규회원이 된 동남부 유럽 소국들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지, 그리고 제7차 종합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과연 6차의 2배로 증액될 수 있을지 등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 7. 평가 및 전망

EU가 연구개발기술과 혁신에 큰 비중을 두는

배경에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유럽 전역의 경제 침체와 성장, 생산성 저하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컸던 시기에는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매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으나 두 지역간의 기술 차이가 현격히 줄어든 20세기 후반에는 더 이상 기술도입과 모방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 결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 더 많은 연구기술개발 자금지원과 함께,
-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유럽 차원의 독립기구 설치
- 세제 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연구기술개발 촉진
- 지나치게 많은 EU 농업지원 예산의 절감을 통한 성장 및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EU의 공동 연구기술개발 정책은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었고 효율성 면에서 계속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많은 기구들을 통합 정비하고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90년대 초부터는 EU 내의 표준화 작업에 큰 비중을 두어왔다. 또한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차원의 연구기술개발 확대에 대해 반대와 비판이 거

세지자 차츰 정책 간, 회원국 간, 사업 분야 간 연계강화와 조정에 중점을 두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7차 종합프로그램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던 기초연구에 좀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의 주도하에 다양한 성장 및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불확실하여 혹자는 EU의 기술혁신 전략을 “공식 문서의 수사학(rhetoric of the official documents)”이라고 혹평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EU의 연구기술개발 정책은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정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와 상호 보완작용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합동연구센터의 확산과 성공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적극 지원하는 실용주의적 접근과 함께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같은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의 설립 추진 등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수행에서 모든 회원

국들에게 자율권이 인정된 EU 통합의 현 단계에서 회원국들 간의 정책조정 장치로 공개적 조정방식(OMC)을 채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방식이 연구기술개발 분야에도 적용되는 한 이 분야의 성과 역시 회원국, EU 내의 기구들, 산업분야 간 등 관련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냐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 약자(略字) 풀이

CEPS=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유럽정책연구센터

CORDIS=Communit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정보서비스 연구개발공동체

DG=Directorate General 총국

ERA=European Research Area 유럽연구지대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EKA=European Research Coordination Agency 유럽연구조정청

FP=Framework Programme 종합 프로그램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공개조정방식

RTD=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연구기술개발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TP=Technology Platform 기술기반

<FES-Info-Series>

2004년 발간 자료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한재각
-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박병석
- “독일의 의료보험개혁(2003)의 동향과 쟁점”, 이준영
-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권순만
- “독일의 노동시간단축 - 역사와 현황”, 구춘권

2003년 발간 자료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의 안보협력 정책”, 한스-요아힘 기스만
-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문제”, 안두순
-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김영윤
- “독일 및 EU의 회계 동향”, 김유찬
- “함부르크항을 통해 본 독일의 항만 관리·운영체제”, 양현모
- “독일 주둔 외국군 구성원의 법적 지위”, 한스-위르겐 카약
- “유럽연합(EU)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 -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이정희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필렬
- “독일의 생명윤리 논의”, 신동일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적 구조 및 발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FES-Information-Series는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정책 대안 모색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시도이며,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FES-Information-Series의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추적하고 평가할 능력을 구비한 전문가에 의해 집필된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그들이 관련된 기관 및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본 재단 사무소에서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Copyright 1998-2004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

